

오늘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결론

# 경고? 고발?...선관위 긴장고조

## 강연 녹취록·동영상·판례 점검 만전 정치권 "선관위 압박 말라" 일제 비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6일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현충일 휴일인 이날도 김호열 상임위원과 조영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법규해석과 직원들이 출근해 전체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정치권도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긴장감 감도는 선관위=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 녹취록과 동영상, 헌법재판소 결정문, 선거법 판례, 질의응답자료와 선례 등 선관위원들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점검에 진력하는 모습이었다.

선관위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의 경인 지역 언론사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회견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 헌정사상 조유리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는 점을 의식한 듯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부당감도 여보인다.

◇선관위 어떤 결정 가능한가=선관위는 전체위원 9명의 과반수 출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선관위원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이 있지만 판례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가 이 사건과 관련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위반은 아니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

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관위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위법행위가 있지만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중대사안이지만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검찰 수사 의뢰 조치가 취해진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범법행위가 명백하고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변론기회를 요구하고 소명자

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고 있어 선관위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라며 "선관위는 오직 '국민'만 보고 관

정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선관위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고 밝혔지만 내심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가름할 것이라는 기류였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위반의 정도나 발언의 의도, 원고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통과 가능성은=F1특별법은 호남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나라당의 '전략'과 맞물려 국회 상정에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민노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주관 기업에 대한 특혜 등을 지적해 행사의 공공성을 높이고 해당 기업의 지나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이의 시행 여부가 법안 통과와 관련으로 떠올랐다.

수정안이 발의될 경우 의원들의 주장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대회 개최의 공공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법안 통과를 위한 요건이다.

서남권 특별법의 경우 다른 지역출신 의원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목포·무안·신안을 묶고 사안별로 서남권 시·군까지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지만 벌써부터 다른 지역의원들의 탄핵 조짐이 보인다. 왜 목포권만 낙후지역으로 보느냐는 불만이 일고 있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이 거주자의 발동해 정치권에서 옛 비슷한 특별법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6월 국회 통과 불투명...비상 걸린 F1·서남권 특별법

## 특혜 공세속 내용 수정 요구도 마지막 기회...불발뎀 사업 차질

6월 임시국회에서 대형 정치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전남지역 현안을 지원할 특별법안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법과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이 이날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서남권 관공래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등 지역현안 추진이 원활해진다. 그러나 또 다시 예고된 정치권의 다툼에 밀려 지역현안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특별법 통과 가능성은=F1특별법은 호남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나라당의 '전략'과 맞물려 국회 상정에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민노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주관 기업에 대한 특혜 등을 지적해 행사의 공공성을 높이고 해당 기업의 지나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이의 시행 여부가 법안 통과와 관련으로 떠올랐다.

수정안이 발의될 경우 의원들의 주장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대회 개최의 공공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법안 통과를 위한 요건이다.

서남권 특별법의 경우 다른 지역출신 의원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목포·무안·신안을 묶고 사안별로 서남권 시·군까지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지만 벌써부터 다른 지역의원들의 탄핵 조짐이 보인다.

왜 목포권만 낙후지역으로 보느냐는 불만이 일고 있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이 거주자의 발동해 정치권에서 옛 비슷한 특별법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서남권특별법의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상 걸린 전남도=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F1특별법이다. 2010년 첫 F1대회 개최를 위해 '질대공기'를 고려, 다가오는 7월에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에 지을 경주장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입장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특별법 마련이 간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경주장 착공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게 전남도의 방침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든든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F1대회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전남도는 서남권 특별법도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 오르기 전에 마무리돼야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종반으로 치달고 대선무드가 무르익으면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6월 임시국회에서 F1특별법과 서남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남도 간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4일 정청래(우리당) 의원 등 문공위원들을 만나 F1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부탁했다. 김영록 행정부지사·이상민 정무부지사도 하루 걸러 국회와 관련 부처를 방문해 F1·서남권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을 놓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만난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관용 "대통령 계속 그러면 탄핵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있는데 대해 "계속 그러면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게 인정돼 탄핵조치를 당했던 대통령이 임기가 만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고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 국회의장이었던 그는 노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주역이며, 현재는 한나라당에서 대통령후보 경선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또 청와대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준법정신을 갖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다만 박 전 의장은 국회에서 다시 탄핵안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한나라당 등을 포함한 교섭단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 조순형 "대통령 헌소 낼 자격 없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한나라당 일각에서 탄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아직 중앙선거관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또 임기 말이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3월 민주당 대표로서 노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조 의원은 이날 이같이 말한 뒤 "선관위의 (위법)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가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에게 헌법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청와대측이 선관위에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결정도 되기 전에 헌소를 내겠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은 헌소를 낼 자격이 없다"며 "헌소는 국가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에 당한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컨벤션산업 활성화로 年 100만 관광객 유치"

광주시 육성책 마련 나서

광주시가 컨벤션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서남권 제1의 컨벤션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6일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국내행사와 전시, 각종 축제 및 이벤트 등 1천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년 20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아시아문화전당·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광주비엔날레(디자인비엔날레 포함) 및 각종 축제 발굴 등을 통해 2011년까지 년 1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조반만 조직원 국제회의전담기구(컨벤션뷰로)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 등과 '컨벤션육성 협

체'를 구성해 컨벤션 산업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컨벤션산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숙박시설 확보를 통한 컨벤션타운 조성-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200실 규모 특급호텔과 어등산관광단지내 250실, 현재 건립중인 상무지구 관광호텔 등 총 1천실의 호텔 객실 확보 ▲남도문화 부각-미향에 걸맞은 음식 메뉴 개발, 광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상설공연·전시·체험장 ▲외국인 유인책-무료 통역 서비스 강화, 공항전세기 취항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컨벤션뷰로와 특급호텔 사업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新 브로드웨이 뮤지컬코미디

# 닌자 CRACKER

2007. 6. 30(토)~7. 1(일)

토 pm.4:00, 7:30 / 일 pm.3:00, 6: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출연 : 조갑경, 심현섭, 김숙, 나정윤, 홍지민, 이정인, 김보라, 김두명, 장윤진, 김현석

주최 : 광주일보사

주관 : 공연마루

인터넷예매 : www.ticketmaru.co.kr

예매처 : 광주은행 전자점

삼복서점 / 현대백화점(10층 캐드상품권 코너)

공연문의 : (062)220-0541, 1588-0766